

2013년 군무원 (2013.6.29)

1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 ① 관리기법과 의사결정방식이 다르다.
- ② 권력성과 법규적용성이 다르다.
- ③ 능률의 척도와 공개성이 다르다.
- ④ 활동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2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된다.
- ㉡ 환경오염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위해물품 규제 등이 좋은 예이다.
- ㉢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 되어 있다.
- ㉣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된다.
- ㉤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진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민간화(privatisation)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 ② 정치적, 재정적 부담 감소
- ③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제고
- ④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보

4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추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 ② 민주성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여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이념이다.
- ③ 효율성은 행정목표의 달성도를 말하므로 수단적이고 과정적이지 아니라 목적적이고 기능적인 이념이다.
- ④ 사회적 형평성은 가치배분의 공정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5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1950년대까지 정치와 정부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전통적 제도주의는 정부의 공식적 구조에만 관심을 가졌다.
-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 ③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사회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중시하였다.
- ④ 1970년 이후 부활한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그에 제약을 가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본다.

6 Lowi 등의 정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배분정책의 비용부담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얼마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 ②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시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한다.
- ③ 보호적 규제정책의 경우 다수의 수혜집단이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 ④ 재분배정책은 재산권의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7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원형에서는 일반대중에게 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시키기 위한 행정 PR이 이뤄진다.
- ②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정부에게 요구하여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한다.
- ③ 음모형에서는 공중의제화가 의도적으로 억제되며 정책내용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 ④ 굳히기형은 대중의 관여정도가 낮고 논쟁의 주도자가 정부인 경우에 해당된다.

8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회 모든 문제가 다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책의제 중 제도의제는 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의(언명)된 문제를 말한다.
- ③ 정책의제 중 체제의제는 일반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이라고 믿는 문제를 말한다.
- ④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만 이뤄진다.

9 립스키(Lipsky)의 일선행정직원론은 다음의 정책과정에서 주로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가?

- ① 의제설정
- ② 정책결정
- ③ 정책집행
- ④ 정책평가

10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 ② 맥그리거가 제시한 두 가지 인간형은 머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과 관련성이 없다.
- ③ 브룸의 선호·기대이론은 동기이론의 내용이론에 속한다.
- ④ 페리(J. Perry)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대안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한 관료의 동기유발을 제시했다.

11 다음 중 현 정부의 행정 각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교육부 장관 - 교육청
- ㉡ 환경부 장관 - 기상청
-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기업청

- ① ㉠, ㉢ ② ㉡ ③ ㉠, ㉡ ④ ㉡, ㉣

12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주관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정규 정부조직보다는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린다.
- ② 정부기업형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 ③ 공기업의 유형 중 주식회사형은 정부가 일정부분 주식을 소유한다.
- ④ 공사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소유의 기업이다.

13 다음 중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특성이론은 신체, 성격, 사회적 배경 등에서 리더로서의 요인이 선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론이다.
-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라도 리더의 행동특성을 훈련시켜 리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
- ③ 아이오와 대학 모델, 오하이오 대학 모델, 미시간 대학 모델 등은 리더십의 특성이론을 연구한 리더십모델들이다.
- ④ 관리망 모델은 리더의 생산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분류하여 각각 부족한 리더십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행태이론이다.

14 시험의 효용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직 공무원에게 기술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validity)가 낮은 것이다.
- ② 기술직 공무원에게 매년 다른 기술과목을 시험보는 것은 신뢰도(reliability)가 낮은 것이다.
- ③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비해 객관도(objectivity)가 더 높다.
- ④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비해 시험관의 정실이나 주관의 개입될 우려가 있고 신뢰도도 낮다.

15 헤일로 효과(Halo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평정자의 전반적인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이다.
- ② 근무성적평정에서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오류를 말한다.
- ③ 평정자의 편견이나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말한다.
- ④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자가 무난하게 중간점수를 주려는 경향을 말한다.

16 다음 중 공직 부패(corruption)의 원인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로 본다.
- ② 시장·교환적 접근은 부패를 시장실패 등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찾는다.
- ③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④ 사회문화적 접근은 법규나 규범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는 국가의 부패 현상을 설명한다.

17 다음 중 예산 편성 형식의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 총칙 - 계속비
- ② 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 ③ 총칙 - 국고채무부담행위 - 계속비 - 세입세출예산 - 명시이월비
- ④ 세입세출예산 - 국고채무부담행위 - 총칙 - 명시이월비 - 계속비

18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예산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예산총계주의
- ② 계속비
- ③ 예비비
- ④ 추가경정예산

19 다음 중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집행 장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총괄예산제도
-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③ 계속비와 예비비
-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0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PPBS)의 핵심 요소는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 ② 성과주의 예산에서 재원들은 거리 청소, 노면 보수와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 ③ 품목별예산제도는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 ④ 목표관리제는 감축관리를 추진할 때 그 의미가 특히 부각된다.

21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정도는 국가의 정보공개제도보다 앞서 도입되었다.
-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정보는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외국인의 명의로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의 청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3년 군무원 행정학 해설

1 **답①** ① 행정과 경영 모두 의사결정을 본질로 하고 동일한 관리기술(인력관리, 조직관리 등)을 사용한다.

2 **답④**

J. Q. Wilson
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집중(특정 소수)	분산(불특정 다수)
이익집단정치모형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규제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모형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고객의 정치모형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대중정치(다수제적 정치)모형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①②③ ① 기업가적 정치 상황은 규제의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고 규제의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비용부담집단은 적극적 활동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지만, 수혜자 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 잘 조직화 되지 못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등이 있다.

② (×) 수혜자들은 다수이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조직화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한다.

③ (×)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은 고객의 정치이다. 편익을 누리는 소수 기업이 적극적으로 포획이나 지대 추구를 하게 되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게 된다.

3 **답③** ③ 민간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등을 약화시킨다.

4 **답③** ③은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다. 효율성은 효과성(efficiency)과 능률성(efficiency)을 포괄한 생산성(productivity)의 의미로 쓰이거나 'efficiency(능률성)'을 번역하여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능률성(efficiency ; 효율성)은 수단적이고 과정적·구조적 개념이지만 효과성은 목적적이고 결과적·기능적 개념이다.

능률성과 효과성

능률성	수단적(수단과 목적 단절)	개별적 수단	구조적·정태적·과정적 양적·단기적·직접적	경제학적 기계공학적	예산 공무원
효과성	목적적(수단과 목적 연결)	조직적·전체적 목표	기능적·동태적·결과적 질적·장기적·간접적	사회학적	기획 담당자

5 **답②** ① ①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법령으로 보고 공식적·가시적·구체적인 제도에 국한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② (×)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즉,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법칙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행태주의는 매우 상이한 재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유사성과 수렴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한 것은 행태주의가 아니라 생태론적 접근법이다.

③ ① 행태주의는 투입주의(inputism)로서 사회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투표,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적 요구, 자원의 투입 등)을 중시한다. 결국 정부의 공식제도는 이러한 투입물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블랙박스라 격하된다.

④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규범'으로 보았다. 제도는 규칙, 절차, 그리고 조직의 표준 및 지배의 구조일 뿐 아니라 관례와 습관을 포함하고 이러한 제도가 행위자의 행위를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6 **답③** ① ① 분배정책의 경우 수혜집단은 개인·집단·지역사회 등 주로 특정적이고, 비용이 일반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비용부담집단은 불특정적이다.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므로 비용부담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얼마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반발이나 저항이 없다. 따라서 가장 갈등이 없고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

② ① 정책결정시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이 명백히 선택되므로, 분배정책과 달리 양 집단간 정치적 투쟁과 갈등이 심하다.

③ (×) 보호적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소수의 비용부담집단과 다수의 수혜자집단으로 나뉘는데 소수의 비용부담집단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다수의 수혜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무임승차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

④ ① 재분배정책은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부, 권리 등과 같은 각종 가치배분의

재조정에 관한 정책이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온다. 재분배정책은 규제정책이나 배분정책과는 달리 재산권 행사보다는 재산권 자체를, 평등한 대우보다는 평등한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예 누진세, 사회보장지출).

7 **답④** ④ (×) 메이(P. May)의 의제설정모형 중 굳히기형은 대중의 관여정도가 높고 논쟁의 주도자가 정부인 경우에 해당된다.

P. J. May의 의제설정모형 - 논쟁의 주도자, 대중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

		대중의 관여 정도	
		높음	낮음
논쟁의 주도자	사회적 행위자들(민간)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on) • 자유민주주의 국가 : 시민집단이 주도 • 민간집단에서 이슈가 제안되고 확산되어 먼저 공중의제가 되고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함(A. Hirschman의 pressed issue에 해당).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 •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 상당한 전문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집단 또는 정부집단이 주도 • 정책결정에 특별한 접근권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정책을 제안하지만 공개적인 논의 확대나 정책 경쟁을 바라지 않음
	정부(state)	굳히기형(공고화형)(State Consolidation) • 국가유형과 관계없음. 정책결정자가 주도 •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시도해 정부의제와 공공의제로 동시에 설정됨.	동원형(Mobilization) • 일당제 국가 : 정책결정자가 주도 •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의제화 후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여 공공의제화.

8 **답④** ① ①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9 **답③** ③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일선행정직원론]은 일선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되는 업무환경을 관찰하고,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하는지를 분석한 이론으로 정책집행단계와 관련된 상향적 집행론이다.

10 **답④** ① (×) 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불만)요인이 충족되면 불만만 제거될 뿐 만족으로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② (×) 맥그리거는 머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인간본질에 대한 기본가정과 그에 따른 관리전략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X이론과 Y이론이라 명명하였다.

③ (×) 브룸의 선택-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④ ① 페리(J. Perry)는 신공공서비스론을 지지한 학자로 관료들의 동기유발은 기업가정신이 아니라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에 반기를 들었다.

11 **답②** ① (×) 각 지역교육청은 교육부의 감독을 받지만 소속은 교육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을 둔다.

②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거 농림수산부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이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고 수산식품분야는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③ (×) 종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던 중소기업청은 2017.7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12 **답②** ① ① 공기업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지니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공성의 원칙 실현을 위한 '통제'와 기업성의 원칙실현을 위한 '자율'의 조화가 관건이다.

② (×)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관으로서 일반행정기관처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신분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며, 예산의 경우도 정부기업예산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

③ ①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민간자본과 정부가 결합된 혼합기업(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으로 출자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④ ①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3 **답③** ③ 아이오와 대학 모델, 오하이오 대학 모델, 미시간 대학 모델 등은 리더십의 행동유형을 연구한 행태론적 리더십이론이다.

14 **답③** ① ① 직무수행능력 무관한 내용을 측정하므로 내용적 타당도가 낮다.

② ① 측정 때마다 일관된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낮다.

③ (×) 주관식 시험보다 객관식 시험이 객관도(채점의 공정성)가 더 높다.

④ ① 면접시험은 면접자의 주관이 반영되거나 정실이 개입될 우려가 높다. 시험의 주관성이 높을수록 신뢰도도 낮아진다.

15 **답①** ① 헤일로 효과 즉, 연쇄효과(Halo effect)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②는 시간적 오류 중 최근성 오류, ③는 상동적 오류, ④는 집중화·중심화 오류

16 **답②** ② 시장·교환 접근(market exchange approach)은 부패란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한 이득을 추구하는 시장 교환 관계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Klaveren에 의하면, "부패한 관료는 자신의 공직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며, 부패를 통하여 얻게 되는 소득의 크기는 시장 상황과 수요-공급 곡선 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점을 찾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규제가 구성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창출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17 **답** ② 중앙정부의 예산편성형식은 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 부담행위 순서로 되어 있다.

18 **답** ① 예산총계주의는 예산 완전성의 원칙으로서 헌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9 **답**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유지방안 아니라 통제장치이다.

20 **답** ④ 감축관리와 관련된 예산제도는 ZBB(영기준예산) 또는 일몰법(sunset law)이다.

21 **답** ① ① (○) 청주시가 1992년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이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였으며 이후 중앙정부[국가]도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년 시행)하여 도입하였다.

- ② (×) 헌법상 독립기관도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 ③ (×) 국내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청구가 있다고 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은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2 **답** ② ①③ (○) 제19조(과소 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 ② (×) 통합된 읍·면·동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치의 필수적이지아니라 임의적이다.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④ (○) 제21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①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3 **답** ① (×)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을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 ②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치단체의 폐지·분합이나 국가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지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주민투표의 요구나 청구는 중앙행정기관장, 주민, 지방의회가 할 수 있지만 발의(주민투표에 부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다.

• **주민투표법 13조(주민투표의 발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3항의 규정(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한 경우)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9조제6항의 규정(자치단체장 직권)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주민투표법 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다.

• **주민투표법 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24 **답** ③ ① (○) 국가업무의 광역적 통일적 추진이 가능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전국적 활용과 명령계통 일원화를 통해 중앙의 정책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② (○)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전문화·기술화 등 질적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 ③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 실현이 용이한 점에서 근린행정을 실현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며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므로 중앙집권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행정과정의 주민참여 기회제약과 자치의식의 저해 및 민주통제 약화를 초래하여 관할범위가 너무 넓어 지방행정 운영의 현지성 원칙을 저해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원칙인 현지성 원칙은 기능배분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최저 지방행정계층)가 담당함이 주민참여와 주민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대응성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할 경우 주민참여나 주민에 의한 효과적 통제가 곤란해져 현지성 원칙을 저해한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 원칙 중 중합성 원칙도 저해하게 된다.
- ④ (○)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보완 내지 보충하는 수직적 기능 분담의 기능을 수행한다.

25 **답** ① * 과거 시점 기준에서 당시의 지방분권 개혁을 묻는 문제였으므로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임.

- ①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 폐지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였던 증액교부금제도도 2004년 법정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흡수·폐지되었다.
- ② 주민소송제는 2006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에 도입·시행.
- ③ 지방교부세는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2004년과 2006년에 인상.
- ④ 분권교부세는 2005년,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에 각각 신설. 현재는 분권교부세 폐지.